

충남 산업·경제 분야의 전망과 과제

-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

백운성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I.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며 되돌아본 국내·외 경제환경

1) 글로벌(Global)시대, 글로벌이 주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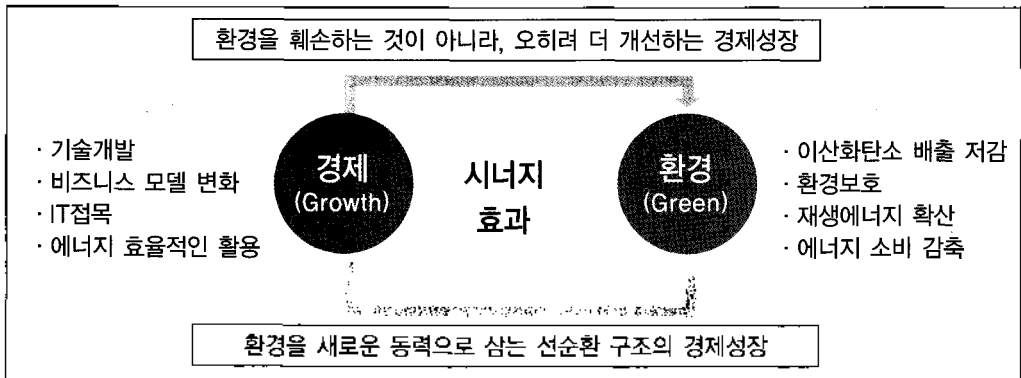
2008년 9월 15일, 세계 주요 언론들은 미국 투자은행 리만브라더스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세계에 전했다. 이른바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시작된 미국발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전세계 금융시장을 패닉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러한 자산버블로 시작된 금융위기는 글로벌화된 금융시장을 통해 전세계를 감염시켰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연일 고공행진을 펼치는 등 금융·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실물경기 또한 급속한 침체로 빠져들게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5.25%에서 2.0%까지 여섯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 금융시장에의 27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미국과의 통화스왑, 정부의 확장적 정책기조 등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확장정책을 통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융위기 이후, 우리는 그 폭과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갈수록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화, 세계화의 진전은 바로 국제금융위기가 전세계로 일순간에 파급된 것처럼 자본, 기술, 시설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국가간 이동에 기반하고 있다. 이제는 한국, 중국, 일본 등 국가의 개념보다 지구촌이라는 개념을 더 중요히 인식되게 되었다. 이러한 지구촌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가경쟁력은 국민이 보유한 지식과 기술 등의 지적능력에 의존한다. 바로 지식정보기반의 시대인 것이다. 1978년 경제개방 이후 연평균 10%의 고속성장을 지속하는 중국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술혁신, 창조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이다. 기술혁신과 새

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수출시장 잠식 및 생산설비 이전으로 산업공동화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2) 저탄소화, 녹색산업화에 기반한 경제성장, 그리노믹스(Greenomics)

2008년 겨울은 국제금융위기가, 지난해 겨울은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전세계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지난해 19일 끝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15차 당사국 회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시 등의 구속력 있는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다만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하는 원칙적 합의에 그쳤다. 이와 함께 선진국은 개도국과 빈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10~2012년까지 30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2020년까지 연간 1,000억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산업혁명 이후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한 선진국과 이제 경제성장이 한참 진행 중인 신흥개도국과의 명백한 차이는 있겠지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슈는 국제사회 관심의 대상이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감축노력과 함께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입의 시도도 있다. 그동안 환경(Green)과 경제(Growth)가 상충된다는 고정 관념에서 환경을 더 개선해야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이다. 즉 환경을 새로운 동력으로 삼는 경제성장을 이루자는 것이다. 그리노믹스(Greenomics)는 환경(Green)과 경제(Economy)를 결합한 용어로 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성장을 이룩해 가는 경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1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지원을 위해 GDP의 2%를 녹색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단위의 지방추진계획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림 1〉 그리노믹스의 개념

3) 미래 한국을 이끌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

실용정부 출범 후 지난 60년을 되돌아보고 향후 60년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에 착수했다. 급변의 신성장동력 발굴 작업은 과거 유사한 사례와는 달리 민간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기업·연구소·대학·정부에 대한 연구개발·인력양성 그리고 새로운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8년 9월 민간 신성장동력기획단은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6대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을 정부에 건의한 후, 범부처 차원에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아 주관이 되어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을 확정·발표(09.1)하였다.

〈표 1〉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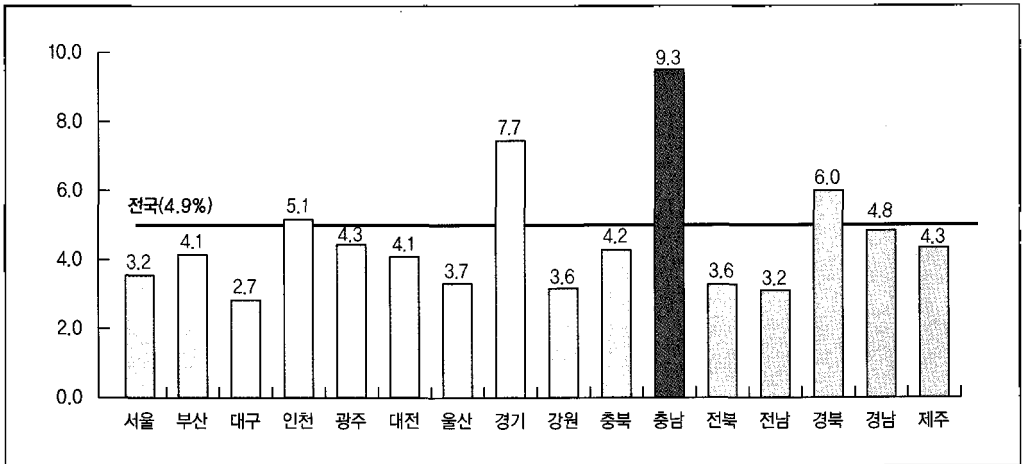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 (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
첨단융합산업 (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
고부가 가치서비스 산업 (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 MICE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모성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17개 신성장동력은 앞으로 3~1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산업 부분으로서 정부는 「녹색기술 R&D 사업」과 연계·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녹색뉴딜 사업은 재정 투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신성장동력은 향후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릴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해 R&D, 초기시장 창출 지원, 세제·제도개선, 인력 개발 등 전방위적인 정책수단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산업정책에 있어 녹색뉴딜, 녹색기술 R&D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신성장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산업의 속성적 측면이라고 본다면, 지역을 포함하는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은 산업정책의 공간적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중 광역경제권은 핵심선도산업과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종합적·입체적인 국가시책을 담고 있다. 즉, 광역권별 발전전략 자

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정책과 연계한 특화발전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또는 지자체차원에서 중앙의 신성장동력과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전략산업과의 동시적 접근을 통한 정책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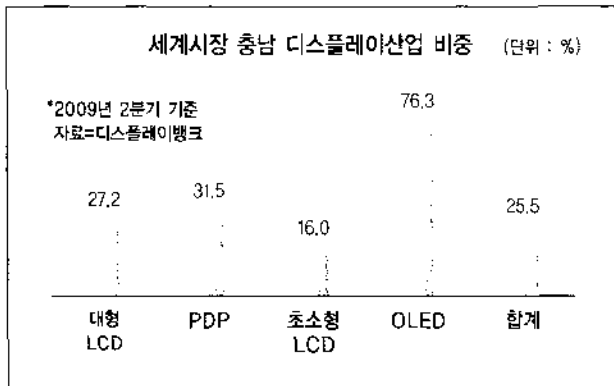


〈그림 2〉 시도별 GRDP의 연평균성장률 (2000~2007)

II. 세계속의 충남, 그 현주소

1) 충남은 한국이 아니라 이미 세계의 중심이다.

2007년 충남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57조 5,634억원(2005년 기준년 가격)으로 전국총생산의 6.0%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충남의 비중이 4.5%였던 것에 비하면 1.5%p가 증가했고, 동기간 연평균성장률에 있어서도 9.26%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러한 충남의 지속적이고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데는 과밀수도권의 대안 지역으로서, 경부·서해안고속도로 및 경부·장항선 철도 등으로 인한 편리한 내륙접근성, 대외 교역창구로서의 항만 등을 갖추고 있어 산업이 발달하기에 좋은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략산업 및 전후방 산업과 연계된 공격적인 외자유치와 이를 지원하는 기업지원전략과 노력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 디스플레이 산업 비중

이러한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로 인해 충남의 수출증가액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10월 기준으로 전국 수출의 10.8%를 점유하고 있다. 경제위기 이전인 2007년에는 478억불의 수출을 기록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2%를 차지했었다. 충남의 인구가 전국대비 4.1%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이 상당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충남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산업이다. 2009년 2분기 기준으로 현재 충남은 세계시장에 있어 LCD 28.8%, PDP 29.9%, OLED 75.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도 관련산업의 60%가 충남에 집중되어 있다. 전세계에서 디스플레이 산업은 바로 충남을 거점으로 움직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고도화는 충남 산업발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2) 또 다시 깨달은 중국, 그 거대한 시장

충남은 경제성장 과정에 있어 수출제조기업이 주력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지역 경제성장을 주도해 왔다. GRDP대비 수출 비율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 50%이내였지만, 2001년 이후부터는 60%대 중반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동기간 전국의 GDP 대비 수출비중이 40%대 전후인 것을 감안하면 수출의존도가 큰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충남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에서 최근의 평판디스플레이, 컴퓨터 등을 포함하면 2009년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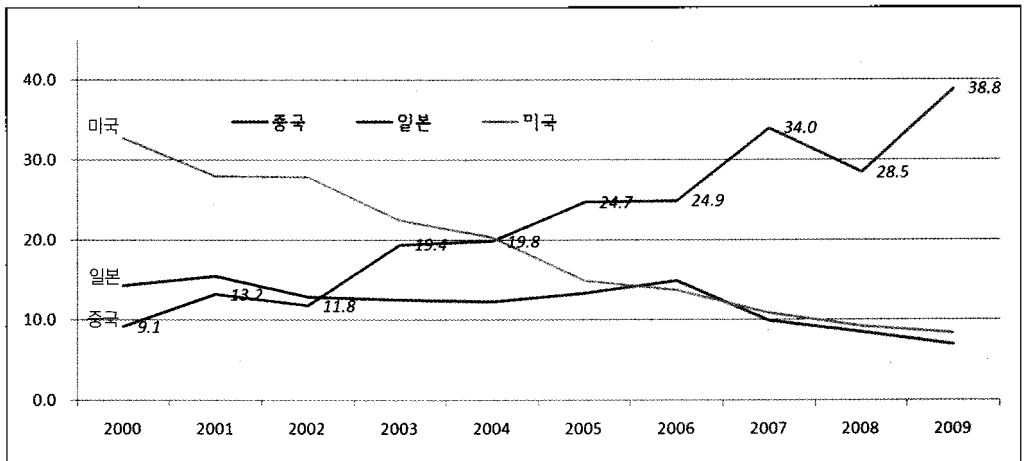
(표 2) 충남의 총수출액대비 주요 수출품목 비중

(단위 : %)

구분	2000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10
반도체	52.5	47.8	40.8	33.2	33.9	33.9	25.7	26.4
평판디스플레이	0.0	0.0	0.0	7.4	19.0	22.8	28.3	37.4
컴퓨터	9.3	11.4	19.2	13.7	9.7	8.5	4.2	4.0
석유제품	9.7	4.5	2.0	2.9	4.5	3.8	8.5	5.4
자동차	5.4	9.9	6.3	4.6	3.7	3.2	3.1	1.1

재 전체 수출의 80%를 전자정보기기가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은 자동차, 선박,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등으로 아시아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유럽·북미지역에 30%를 수출하고 있다. 1995년과 비교했을 때 아시아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고, 북미 비중이 감소한 반면 유럽 및 기타지역의 비중이 증가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어느정도 진행 중에 있다. 반면 충남은 사정이 조금 다른 편이다. 기존에 충남의 가장 큰 수출시장은 미국이었지만, 2005년 이후에는 중국이 충남의 최대 수출국이 되었다. 2007년 34.0%, 2009년 10월까지 38.8%로 대중국 수출이 도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중국 수출 증가가 충남의 경기변동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위기 이후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생산과 출하 등이 활성화되어 정상화 된 것에는 바로 중국의 내수 부양정책의 영향이 컸다. 이러한 측면에서 충남은 이번 경제위기 극복의 가장 큰 요인을 중국에서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특정 상품의 높은 수출의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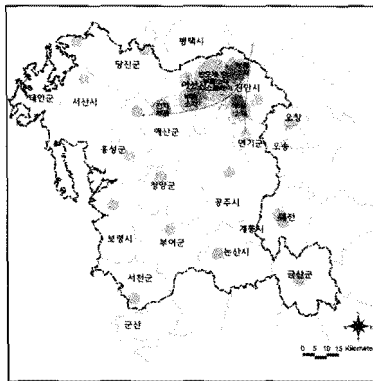


(그림 4) 충남의 주요 수출국 시장규모 변화 추이 (2000~200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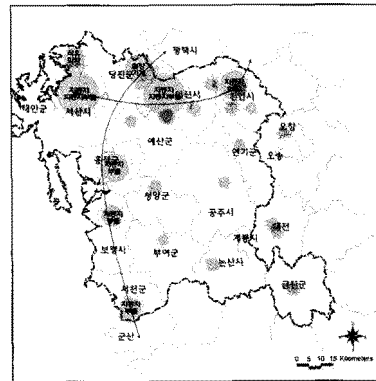
도와 더불어 소수 국가에 편중되는 산업구조하에서는 지역산업 및 경제가 대외경제 변화에 그대로 노출된다. 앞으로 충남은 기존 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해 대외 경제충격을 완화하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점차 누적되어 가는 지역간 불균형, 새로운 지역성장동력의 창출 필요

2000년 충남의 산업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이 4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제조업 38.2%, 농림어업은 13.5%의 구성비를 차지하고 있었다. 2007년에 있어서는 서비스업 비중이 38.8%로 1.9%p 상대적으로 낮아진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38.2%에서 45.8%로 무려 7.6%p가 증가했다. 이러한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은 충남의 4대 전략산업인 전자정보기기, 자동차 및 부품산업 등의 비약적 발전에 기인한다.



〈그림 5〉 디스플레이산업 집적지 및 확산경로



〈그림 6〉 자동차부품산업 집적지 및 확산경로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발달이 공간적 분포 특성상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천안·아산 지역을 중심으로 당진, 서산까지의 서북부권과 경부축(경부고속도로)을 따라 연기·논산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집적화되어 발달하고 있다.¹⁾ 충남을 북부권, 서해안권, 내륙권, 남부권의 4개 권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북부권에 59.9%가 집적되어 있는 반면, 서해안권은 7.3%에 불과하다. 16개 시·군으로 나누어서 볼때는 상위 5개 시·군이 하위 5개 시·군의 8배에 해당돼 지역적으로 불균형

1)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에 있어 천안(34.33%)과 아산(17.19%)이 충남의 5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경부축을 따라 계룡·논산(계룡 7.60%; 논산7.35%), 연기(6.94%), 금산(5.77%) 순으로 집적되어 있다.

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의 기업과 산업의 증가에 있어서도 충남 16개 시·군의 최근 10년간의 증가율을 보면 북부권의 아산·서산시가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적 기반이 취약한 태안군과 내륙지역에 위치한 부여군, 공주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행히 최근 들어 산업이 북부권에서 내륙·서해안권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지만 지역 불균형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충남이 지역불균형을 완화시키며, 글로벌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화산업인 IT산업을 활용하여 녹색 경쟁력을 갖춘 신산업의 창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별 역할분담에 의한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고, 신성장동력에 기반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녹색성장전략을 수립·추진하고, 기업들이 기술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투자와 기업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Ⅲ. 지속성장을 위한 충남의 산업발전정책 과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충남은 황무지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는 건설업과 제조업 등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수도권은 점점 포화상태에 접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충남 서북부지역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 자의적은 아니지만 이것이 충남 산업발전의 첫 단추다. 다른 지역이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기반한 거점개발형태의 산업집적이 이루어졌다면, 충남은 민간기업의 수요에 의해 산업집적이 되고 그 발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수도권과 인접한 천안·아산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선도하는 디스플레이산업의 메카로 성장했으며, 현대오일뱅크와 삼성토탈, 엘지화학 등이 위치한 서산은 현재 국내 석유화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현대하이스코, 동국제강 등이 위치한 당진은 항만의 장점을 살려 서해안 최대 철강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리딩기업이 산재하면서 2, 3차 협력업체 등이 신산업지대로 몰려들고 있다. 실제로 충청남도는 민선4기 출범 이후 2009년 6월까지 외자 26건에 48억 21백만불, 기업 2,502개를 유치하는 등 전국 최고의 기업유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충남은 한국의 성장엔진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충남이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투자위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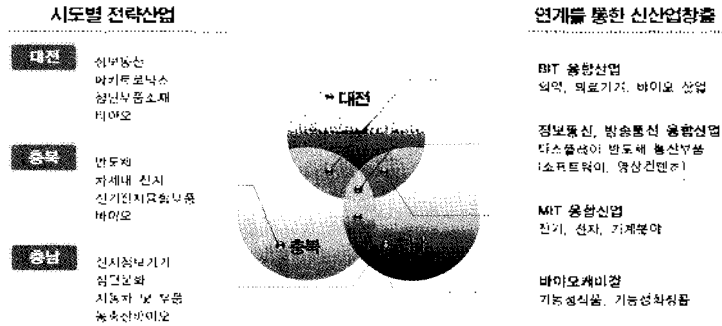
산업정책에서 성장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충남의 지속성장을 위해 시스템적인 성장관리와 함께 현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산업정책(17개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전략)과 지역발전정책(조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에 대해 충남의 미래경제상의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

1)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허브-스포크(Hub-Spoke)형 기술혁신체계 구축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발전정책의 가장 큰 틀은 전국을 5+2의 광역경제권으로 묶어 각 권역을 특성화 발전시켜 지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경쟁에 있어서 지역이란 국가차원이 아니라 산업이 기능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혁신을 창출하고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이처럼 산업의 각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지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그런 지역들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을 이룬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구상에 있어 내적으로는 기존의 행정구역단위의 정책을 넘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인접 지역들이 가능적으로 통합하여 인프라 구축, 산업지원, 지역개발 투자의 시너지 효과 제고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이다. 현 정부의 광역구상은 인구, 경제 및 산업, 지역의 동질성 등을 바탕으로 전국을 7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이미 지난 2008년부터 각 권역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적 발전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광역경제권의 핵심인 선도산업은 별도의 지원단이 조직되어 이미 사업을 시작하고 있으며, 광역경제권에 대한 총괄 업무를 추진할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도 지난 9월 출범하였다.

광역경제권 사업은 지역단위 또는 부처별 정책 및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과 비효율적인 문제를 제고하고, 행정구역단위를 탈피해 산업의 기능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기존 시설의 재조정과 통합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정책은 기존의 혁신인프라와 지원프로그램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운 조직과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또 다른 중복투자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축적된 역량을 약화시킴으로써 지역경제질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이면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4대 전략산업중심의 4+9지역진흥사업(전략산업별 패키지형 지원)과 새로이 도입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등과의 명확한 범위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2012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4+9지역진흥사업을 점진적으로 축소·변경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통해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글로벌 경쟁거점과 지역경쟁거점 클러스터를 육성할 계획이다.²⁾



〈그림 7〉 충청권 전략산업의 연계산업분야

따라서 새로이 재편되는 국가산업 및 지역발전에 기인한 지역전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신성장동력산업의 지역 정착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의 산업별 혁신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쟁 및 지역거점 클러스터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과 경쟁거점 클러스터 및 지역거점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연계협력 사업모델 발굴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지역 전략 산업 이외의 철강, 금속, 석유화학 등의 이미 클러스터가 형성된 지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거점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새로운 지식기반의 녹색 비즈니스산업 육성

저탄소 및 녹색산업화에 기반을 두고 경제성장력을 배가시키는 새로운 성장 개념이 녹색성장이다. 저탄소화는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 CO₂ 배출량을 감축시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고(수비적 녹색화), 녹색산업화는 녹색기술, 환경친화적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성장력의 원동력으로 삼는 것(공격적 녹색화)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11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성장지원을 위해 GDP의 2%를 녹색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

2) 현재의 중앙정부에서 제시하는 광역경제권 사업의 방향은 광역경제권내 기추진중인 선도산업과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통합하여 광역경제권 핵심산업과 시도별 중점산업으로 이원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거점은 국가 산업발전의 핵심공격을 형성하는 동시에 광역경제권 산업발전의 선도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충청권선도산업 (의약바이오, NEW IT)을 중심으로 대표 전략산업을 연계하여 형성하며, 지역경쟁클러스터는 광역경제권내 산업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동시에 기초생활권 산업발전의 선도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현 전략산업과 신규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연계하여 형성할 계획으로 있다.

력으로 삼겠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녹색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어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고 아직 시장초기단계로서 선도기업과의 격차도 크지 않아, 한국기업들이 시장의 주역으로 나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녹색산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며, 현재 도내 제조업에 대한 저탄소화 및 저탄소화를 위한 기술지원 등을 충남도차원에서 적극 필요하다.

이러한 제조업의 녹색화 및 성장관리와 함께 필요한 것이 생산자서비스업이다. 충남도내 제조업은 부분적으로 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한 차원 제고하는 회계, 마케팅, 디자인, 교역, 법률, 금융, 보험 등의 비즈니스 서비스와 신성장산업으로 등장하는 교육, 의료, 관광, 여가 등 문화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충남에서 제조업의 비중은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제조업만으로는 성장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녹색산업화, 녹색 비즈니스산업의 육성이 우리지역의 경제발전의 과제가 되고 있다.

3) 지속성장을 위한 고용창출과 인적자원개발

최근 들어 경제성장을 두고 고용없는 성장, 일자리 창출없는 성장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 이전까지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성장률에도 불구하고 고용성과는 좋지 못했다. 성장을 통해서 고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현 정부도 고용에 대해서는 더욱 열악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한 성장으로 고용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러나 90년대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서도 성장이 고용을 항상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현실에 그대로 보여줬다. 산업에 있어 기술혁신의 속도는 점차 가중되어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고용의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충청남도는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한 반면 GRDP 대비 취업자수의 증가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는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가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인력과 인적 자원을 지나치게 배제하는 자본투입 위주의 성장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해왔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높아지는 긍정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고부가가치 인력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자본 투입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에 치중했다는 한계를 보인다.

고급인적자원은 수요가 분명해야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다. 즉, 고속런 인력을 절합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내는 혁신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강조된

다. 중소기업은 지역 고용창출의 주요원천 역할을 수행하고, 위험부담이 높은 새로운 제품과 전문화된 부품의 개발 및 생산을 담당함으로써 기술혁신의 주체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 내 동종 또는 이업종 간의 활발한 산업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벤처기업 등의 혁신적 중소기업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어야 하고 이 부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외 중앙정부의 신성장동력, 녹색산업, 광역경제권 등의 미래산업정책에 대응한 인적자원개발과 수요자 중심형 및 인적자원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다각적인 인적자원개발과 수요자 중심형 노동인력의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해 경제주체간의 파트너십을 유도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이 된다.

4) 외투기업 및 지역기업에 대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그동안 충남의 산업정책은 기업유치를 통한 규모의 확대를 추구해왔다. 앞으로는 현재의 기업유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 투자기업의 지역 내 뿌리내림을 촉진하는 것이다. 해외투자기업을 포함한 도내 투자유치기업과 지역 산업과의 기술·생산 협력관계를 확대하여 해외투자기업이 지역기업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고, 지역기업들이 선진 기술, 생산 및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경쟁력 있는 자생적 생산기반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산업 또는 기업들의 국가간 이동이 상당히 자유롭다. 어렵게 유치해 온 기업들이 다시 외부로 나간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토착화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내발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분산형, 공급자 주도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서비스를 통합형, 수요자 지향형으로 전환하고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지원서비스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지역산업의 발전방향과 전략산업의 혁신특성에 부합하도록 기업지원서비스를 특성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수준의 정주 및 비즈니스 여건 구축이 필요하다. 외국의 기업인 전문가, 기술 인력 및 가족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의료, 문화 및 주거 등 정주기반의 구축과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업무관행과 제도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기업인, 일반인에게 비즈니스하기 좋고 살기 좋은 곳이 바로 지속가능한 혁신클

러스터의 궁극적인 모델이기 때문이다.

5) 21세기 동북아의 지식창조도시 건설을 위한 정책의 기획 및 관리능력 제고

우리나라와 지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중앙정부가 모든 부분을 통제, 관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하에 있고,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중심으로 산업정책이 전환되면서 지역 정책에 있어서도 개별지역의 특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현재의 중앙정부 지역정책은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기관과 개별 정책을 집행하는 중앙부처가 상이하고, 대부분의 지역사업들에 대한 자원배분의 권한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것은 다양한 지역정책들간의 연계성이 매우 비흡하고, 정책들이 전체적인 시각에서 추진되지 못하여 국가 차원에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성격과 목적을 명확히 하고, 정책간 상호 연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정조직의 역할을 하며, 재원을 포함한 권한과 책임을 점차 지방으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큰 틀 안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지역의 내생적 발전전략을 스스로 수립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강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테크노파크 및 지역발전연구원 등 지역 산업관련 전문기구의 기획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창출기반과 인적자원 확보 분야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세계 산업동향,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부합하는 장기적인 지역산업의 미래비전을 마련하고, 설정된 미래상에 맞도록 다양한 지역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배, "광역경제권 기반의 지역산업 육성방향과 과제", 충청남도 정책간담회 자료집, 2009.10.
 매일경제신문, "Greenomics가 경제위기 해법이다.", 2009. 6. 29.
 백은성, "신성장동력 비전 및 발전전략" 발표에 따른 충남의 대응방안, 충남리포트 제10호, 2008.
 ———, "충청광역경제권의 추진여건과 발전과제", 한국거버넌스학회, 2009. 6.
 ———, 김정연, "광역경제권 개발의 효율적 추진방안", 지역개발학회, 2009. 7.
 최윤기 외, "한국경제의 발전경로와 지역정책", 산업연구원, 2007.
 충청광역경제권추진팀, "충청광역경제권발전계획(2009~2013)", 2009.
 충청남도, 충청남도 녹색성장전략 및 추진계획, 2009.
 한국은행, 「최근의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2009.11.
 한우호, "경제위기 극복 이후 충남의 산업발전 전략", 열린충남 통권 48호, 2009.10.
 황인성 외, 「6대 이슈로 본 2009년 하반기 경제」, CEO Information, 삼성경제연구소, 2009. 7.